

#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0. 3. 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3월 4일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 의결안건 제70호~제77호 참여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 의결안건 제69호~제76호 참여

윤 면 식 위 원

\* 의결안건 제69호 참여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 4. 회의경과

(09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3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4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3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4차 금융위 안전  
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전 심의

☐ 의결안전 제69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주)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886건의 위반이 있었고 금리전망 등에 대해서 투자  
자들에게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지  
적사항을 기초로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 건의가  
있었음.

(주)하나은행은 이번에 투자자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다만, 조치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의 실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함.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DLF에 가입한 손님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가입 손님들의 70%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고 98%가 금융투자상품의 경험이 있는, 실제 투자경험이 많은 고객들이었음. 평균 금융자산금액이 11억 원으로, 고액자산가들 위주로 판매가 되었고 펀드상품 평균거래기간을 보더라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던 고객들이었음.

이번 지적사항들의 유형을 보면 가장 건수가 많은 두 유형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임. 이 중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은 장기간 거래한 고객들을 PB영업점에서 PB들이 오랫동안 자산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서 확인서 징구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래신청서의 설명서 교부의무 확인란임. 2번을 보면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 등에 대해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에는 자필기재가 되었던 사안인데 1번을 보면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수령거절함□]’에 표시(check)가 누락된 것들이 가장 많은 482건이 지적되었음. 실제로 상품제안서라고 하는 사모펀드상품에 대한 안내서가 고객들에게 제시되고 교부되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check)가 누락되었던 것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 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음. 여기에서는 저희가 실제 상품에 대해서 뭔가 상품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거

나 왜곡한 점이 없다는 것을 정리하였음.

그 중 판매채널 부분을 보면 실제 이 상품을 (주)하나은행에 서는 거래경험이 많은 PB들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DLF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모션이나 판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었음. 문제가 되었던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사이에 실제 이 상품이 판매되었던 추이임. 계속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있다가 2019년 3월에 미국에서 금리동결 발표를 하는 시점, 즉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인지된 시점에는 신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보류하고 중단하였음.

다음으로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 금감원에서는 손실규모에 대한 인식을 희석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음. 과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금리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상품의 핵심 위험(risk)요인은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음. 어찌 보면 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임. 이것이 상품제안서에 실제 있었던 내용인데 원금부분을 보면 최초기준가격 대비 만기평가가격이 50% 이상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A, B로 표시된 부분 중 B구간에서 원금의 전액 손실이 가능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음.

상품의 금리추이에 대해서도 과거 CMS금리가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이 설명자료를 통해서 제시되었음. 즉,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리상승 기조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주)하나은행이 자의적으로 금리

의 추이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금리가 상승 기조라는 것이 감독당국과 금융시장 전반의 예측이었음. 예시적으로 2018년 9월 즈음에 금감원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 연준의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었음.

여기까지 저희가 실질을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후수습 노력을 양정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보면 사후수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2017년에 있었던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재심의 결정을 통해서 감경된 사례가 있었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사안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 때문에 기본 양정에 더해서 가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주)하나은행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후수습 노력을 이 사안이 중하다는 것 때문에 감경사유에서조차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점을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6개월의 일부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舊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있어서는 1개월의 일부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금융기관 인수나 설립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 인수에

있어서도 대주주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서 은행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미 확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기관제재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함. 舊동양증권 사례에서는 1개월의 일부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실제 불완전판매의 유형이나 규모, 동기나 원인, 수단과 방법 등을 봤을 때 저희 사안에 비해서는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음. 舊동양증권 사례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 드리고 이런 부분을 봐서 형평에 비추어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해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도 과중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불완전판매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내부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치원인사실을 보면 경영진이 펀드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해서 무리한 전략목표를 설정한 반면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소홀히 하여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결국 지적하는 내용은,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그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이 결과라는 것인데 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결과책임에 대해서는 앞서 진술한 불완전판매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기관제재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24조의 내용을 보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로 규율할 사안이 아님. 금감원이 원

인 부분의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면서’라고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용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음.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내부통제기준은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지배구조법 제24조임. 규정의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 판례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즉 내부통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잘 안 지켰다 또는 그것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관련 법령에서 마련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음. 실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 중인 것을 보더라도 반대해석상 현행 규정상으로는 마련의무로써 ‘내부통제기준을 안 지켰다’ 또는 ‘점검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음. 결국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용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위반한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임.

결국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만들라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하나은행에서는 기본적인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부통제 규정의 내용은 글씨가 작고 잘 안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이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하위 체계상 은행장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개인영업그룹장(부행장) 그리고 WM사업단장, 투자상품부장 이런 체계(hierarchy)로 내려가면서 각각의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절차, 준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 구체적인 활동부분을 보면 이번에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사항들은 전산, 서식이나 양식의 미비 아니면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된 사항들이었음. 이것을 가지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라고 할 사안인지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자 하는 부분임.

구체적으로 (주)하나은행의 내규 체계를 정리해 보았음. 내규 체계도 상위 규범부터 구체적인 규범까지 체계화되어 있고 그 중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중간에 있는 수신업무 절차, 그중에서도 'DD8. 집합투자 증권 업무'라는 내규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거기에서는 투자 권유 및 판매의 일반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판매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들여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범화하여 마련하고 있음.

금감원에서 지적한 전제에는 (주)하나은행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기본적인 오해 내지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주)하나은행에서도 타 은행보다 잘 하는 것이 있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기준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하나은행에서는 임원이 다수인 상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사모펀드의 판매 또한 타 은행에서 일반 영업점에서 판매할 때 (주)하나은행에서는 PB채널에서만 판매하도록 통제해 왔었음.

다음으로는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사실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금 금감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세 가지의 내부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불완전판매 환경을 경영진이 무리하게 조성했다고 지적한 부분임. 이 부분이 정황에 관계된 것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인식이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함.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던 2018년 5월 17일에 작성되었던 보고서임. ‘자산관리 비전2020’이라고 하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 수수료가 1,700억 원, 2,350억 원, 3,000억 원 이렇게 많은 수수료 증대를 목표로 하니까 PB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보셨던 것 같음. 그런데 이 보고서의 취지 자체는 PB와 VA라고 되어 있는데 PB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VA는 VIP Advisor라고 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PB보다는 소액의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조직임. PB조직과 VA조직의 수수료 목표액을 PB는 43%, 40%, 35%로 그리고 VA 같은 경우에는 57%, 60%, 65%로 증대하자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이라는 부분을 보면 자산관리수수료를 PB 중심으로만 추진했다는 지적에 비추어서 추진전략 두 번째

를 보면 VA 및 지점장, RM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음. VA채널과 관련해서 2018년 대비 2020년의 목표를 100% 향상, 그리고 법인 영업에 관해서는 150% 향상을 추진해 보자는 목표의 설정이고 VA채널의 주력 상품란을 보면 적립식 펀드, 실손 및 보장성 보험 등 소액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DLF상품과는 무관한 상품들이었음.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서 DLF를 무리하게 판매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다소 무리한 지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금감원이 지적했던 문건의 수치가 실제 경영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초기 보고서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적되었던 같은 연도의 11월 보고서인데 거기도 보면 'DLF 확대(0.6조→1조원)'이라고 쓰인 것 때문에 무리하게 DLF판매가 추진되었다고 지적되었던 부분임. 문구를 잘 읽어보면 다양한 신상품, 그러니까 스프레드 DLF나 원화 지수 DLF, 이번에 해외연계상품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까지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음. PB들에 대해서 인사권 또는 PB의 실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부분임. 결국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실제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금감원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라고 총 8개를 지적하였음. 8개 지적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식, 양식이나 전산과 관련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음. 8개 항목 중에서 실제 대고객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부분임. 그런데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보면 별도의 변경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2~36개월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음. 그런데 (주)하나은행에서는 전산상으로 3년으로 제어해서 운용해 왔고 그래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임.

투자성향의 분석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분석결과표가 자동출력 되게 되어 있고 내규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림. 계좌개설신청서에서, 원래 공모의 경우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는데, 사모는 투자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집합투자규약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구체적인 상품제안서를 제시했어야 된다고 지적된 부분임. 그 서식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나 뒤에서 보여드리는 교육자료에서는 다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음.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은행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은행장부터 실제적인 영업점까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음. 그래서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영업점에서 준수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봐 주십사 말씀드렸던 부분임.

점검기준 마련의무는 점검기준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실제 점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보았음.

(주)하나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정리한 부분이 있음. 2019년 1월 11일부터 내부통제혁신단을 구성하고 내부통제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뒷부분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과 검사방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진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실이 하나 있었고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음.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하다보면 내부통제기준이 어떤 형식인지, 불완전판매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은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음.
- (진술인)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투자증권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품판매 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참고자료에 표시를 했음.
- (위원) 그리고 그것과 내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부통제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내규 같은 것들을 또 운영하지 않는지? 그것이 아마 상호보완적 역할일 텐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의 내규와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진술인) 저희가 영업내규라고 해서 '수신업무 절차 DD8. 집합투자증권 업무'라는 것에서 펀드 관련하여 판매절차와 기

준들에 대해 규정화해서 적용하고 있음. 이 중 판매절차 관련해서는 규정에 상세히 나와 있음. 그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영업점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나가는 지침, 매뉴얼, 영업점 교육자료 이런 것들은 공문으로 수시로 나가고 그룹 포탈 내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 그것을 또 서식, 양식이나 전산 이런 항목들에 반영을 하고 있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아온 것으로는 거기에서 제어하고 있는 전산이라든지 서식의 항목들이 한 100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있음. 이번에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도 그 중 일부임. 그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부분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영업점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임.

- (위원) 내부통제기준이나 어떤 내규 상에 있는 내용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준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현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실제 법적으로 문서로 구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은행의 내규라고 생각이 됨.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규도 예를 들면 이사회 전결사항이 있고 행장 전결사항이 있고 체계(hierarchy) 같은 것이 있음. 금감원에서 이번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사회 전결이나 행장 전결사항

이 아니고 투자상품부장 전결사항인, 아주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영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음. 이번 건 부문검사는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음.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불완전판매도 방지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내부통제구조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2가지를 제안함. 첫째는 내부통제구조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지침에 대해서 당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해당 회사만 조사하면 이것은 시기상으로 늦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같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 드림.
- (위원) 결국 문제의 핵심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는 것 같음. 회사와 금감원 간의 관점 차이가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가 제재를 하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있음. 회사 측에

서는 결과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에,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기준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법으로 잘 명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법에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실제로 감독상의 지침, 기준 이것도 다 관계되는 것 같음.

○ (보고자)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사모펀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은행들도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시장이 커지는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영업전략을 펼 때는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내부통제기능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될 충분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건은 오히려 사모펀드 활성화 취지를 악용한 사례들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

예를 들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전산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실제로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상품선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9%이상을 생략하는 절차로 운영을 했음. 이런 것들을 준법감시인들이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선관주의의무 차원에서 고객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는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함.

-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함. 제도개선과 현행법 하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사고가 났음.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내부통제기준 미비도 그 중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제재의 경중을 정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중한 제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내부통제기준에 전반적인 흠결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양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듦.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 이 정도 흠결이 실무적인 부분이라면 이 정도이고 모양 전체의 흠결이라면 굉장히 중한 징계가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정도의 판단기준은 가지고 있는지?

- (보고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제재심의국과 법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진행했음. 물론 이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 조치기준)에 대한 부분이 세척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피해 부분이라든가 또는 예측가능성 부분 등 4가지 정도 금감원 제재심의국에서 만든 제재기준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사례를 분석한 것이 있음. 그 기준에 금번 (주)하나은행과 (주)우리은행 제재안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금감원 법무실 그리고 내부 제재심의국에서 수차례 검토하여 부합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음.

내부통제기준은 법규에서 상세하게 요건을 정하는 외부통제와 달리, 법규에서 하나하나 요건을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고 다 정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켜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정할 수는 없음. 그리고 그것을 다른 법규처럼 할 수는 없고, 대신 어떤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에 대해서 자산부문이 급증하게 되면 위험도 급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증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규에서 정하고 마련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에서도 자산부문의 판매를 더 독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부통제 통할책임을 부여하면서 위험을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말씀하신 답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임.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인데 지금 세척화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 그러면 수범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지? 금감원에서 원래 올린 제재조치안의 지적사항은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은 마련하지 않았단, 이 항목은 점검 절차에 관해서 안 했단 식으로 마련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련 안 했단고 처벌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음. 그러면 과연 그 실효성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재기준을 금감원 제재심의국이나 법무실에서 검토한 자료는 있으나 세척화가 되지 않았단 얘기이며, 이 원칙 부분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음. 그러니까 수범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

왔다는 문제를 따질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는 기준의 판단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실효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주고 처분이 나가야 되는 것이 원래 행정상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신 방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과 밖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완전 별개임. 그것이 단순히 검사하고 감독하고 지적해 주는 것의 문제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징계처분이 나가는 것임. 과태료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경고가 나가는 불이익 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당국의 의무인 것임.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효성 부분은 시행령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며, 시행령에 실효성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세칙에 담긴 부분이라는 것은 아님.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각호의 항목들이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그런 경우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였음.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가 세척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법규에서 명시해 줘야 하는데 외부통제와 달리 내부통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효성 있고 제대로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은 각호의 실효성을 확보·담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내부통제기준에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투자자정보 확인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악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최대한 막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이나 이런 것에서, 아까 변호인이 얘기할 때 생략한 부분인데, 과거 투자자정보 활용을 3년까지 할 수 있으려면 투자자에게 미리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미리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거 1년 또는 3년 전의 투자자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자가 공격투자형이나 안전추구형이나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동 DLF 상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은 은행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예 과거 투자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동의 받는 절차를 아예 내규에서 무시하고 과거 것을 그냥 갖다가 쓰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임.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실효성 판단기준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의견이 아닌가 싶음.

- (위원) 금감원 검사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검사안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금감원 제재심의국으로 가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함.

- (위원) 이 과태료 처분과 지배구조법에 대한 위반 부분이 과거 선례가 있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선례를 검토하고 내부 기준을 만드셨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은지?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은 동기는 크게 보지 않고 ‘中’으로 봤는데 결과책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중대’로 봐서 과태료 처분이 된, 동기를 ‘中’, 위반결과를 ‘중대’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갔음.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기도 ‘上’이었고 위반결과도 그에 따라서 ‘중대’했다고 보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 당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관한 동기판단을 ‘中’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은 부작위라고 했음. 어떤 기준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극적인 고의는 아니었으니까 동기를 ‘中’으로 봤고 위반결과가 ‘중대’로 나왔음.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것 같은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작위가 아닌지? 그런데 이번에는 ‘上’으로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선례를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것인데 선례를 검토하고 이번 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재가 올려진 것 아닌지?
- (보고자) 이번에 (주)하나은행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해서 동기를 ‘上’으로 본 것은, 행위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통제 마련의무 책임이 있는 통괄책임자인 ○○○ 부행장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본인이 자산영업전략을 수립하고 펀드판매와 관련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었고 그리고 펀드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충분히 내부통제 미흡이나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고 본인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 동기가 '上'이라고 판단했음. 물론 위반결과는 당연히 사회적 물의라든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소비자 피해 등을 감안했음.

- (위원) 위반결과가 '중대'인 것이 맞는데 동기판단에 대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는 합리적인 예측범위에 있을 수 있는데 부작위라는 것으로 했음.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예측가능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上'으로 나왔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함. 불완전판매를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한 5~10% 나왔다면 그 원인은 아마 미준수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수 있음. 그렇지만 (주)하나은행의 경우에는 2개 중에 1개는 법규위반이고 3개 중에 2개는 내규위반까지 판단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은 당연히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 부행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임.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표본점검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위반동기를 '上'으로 판단했음.
- (위원) 납득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불완전판매 행위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의무를 섞어 말씀하셨음. 준수의무와 마련의무는 다른 것이고 마련해야 되는 것과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의무는 다른 것임. 그 다음에 지금 불완전판매와 지배구조법 위반은 다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증권의 사례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中’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책임을 물어 ‘중대’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 그런데 지금 이 지배구조법에서는 마련의무만 얘기하고 있음. 마련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上’, ‘中’, ‘下’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위였을 경우 ‘中’으로 했는데 이번 건은 ‘上’으로 했음. 그러면 똑같은 부작위에 대해 왜 ‘上’과 ‘中’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삼성증권과 (주)하나은행 사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어보고 싶은 것인데 지금 위반결과나 불완전판매 행위에 나오는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상’, ‘중’, ‘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제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뢰성도 마찬가지로 실효성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양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음.

- (위원) 물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아니냐는 것은 질적 수준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음. 그리고 또 이 사안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3월 현재 4대 은행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세부 내부기준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은행에 못지않은 내부통제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연 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주)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못지 않은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하나은행의 내부통제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 (보고자) (주)하나은행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 이전의 제재심의 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음. (주)하나은행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이 내부통제 부분만 ○등급임. 아마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등급 상태이고 2017년 4월에는 이러한 내부통제 미흡 때문에 (주)하나은행 경영진한테 약속서를 받았음. 내부통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부분조차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전반적으로 (주)하나은행의 내부통제수준은 여타 시중은행보다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각 내부통제기준을 사안별로 비교했을 때 (주)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낫다는, 그러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다음에 논의하실 (주)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선정위원회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미마련된 것이었음. 그렇지만 (주)하나은행이 여타 은행보다 상품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내규는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던 것임. 그리고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을 지적했던 부분은 실제로 내부통제기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효성 있다는 말은 목적이 법규준수,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



고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임.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일견 (주)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임.

- (위원)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성격이 약간 다름. 불완전판매는 이에 대한 제재가 선례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발생했다는 것이 보이는데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선례가 없어서 지금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규정상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결과 발생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임. 그것과 관계없이 사전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임. 그리고 이것은 시중은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은행이나 증권, 보험, 저축은행 전부 해당되는 것임.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런 미비점이 나오면 이것을 선례로 해서 형평성 있는 제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함.
- (보고자) 이번 (주)하나은행, (주)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다른 은행들도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서면조사과정에서 알아냈고 이런 것을 향후 검사과정에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 (위원) 저는 코멘트를 하겠음.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임. 공평무사해야 되는

데, 다른 시중은행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하면 다 지적이 될 것 같음. 그렇다면 다 ‘기관경고’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그 뒤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시기를 2018년, 2019년으로 하면 아마 비슷할 것임. 그렇게 함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실효성 있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될 것임.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기관경고’를 하고 뒷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것이니까 고민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실효성 부분이 시행령이 잘못이라면 시행령을 고치든지, 규정이 잘못이라면 규정을 고쳐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있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미리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임. 상품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인데 1년에 한 번 열었다. 주 1회 열었다. 이런 것이 실효성이라고 생각함. 정확하지 않지만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음. 월 1회 정도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사록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위원회를 하는데 의사록이 없으면 자기 들끼리 알아서 한 것임.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의사록이 아닌데, 의사록이 있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가 나타난다면 실효성 있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고 최소한 그 정도로 하면 된 것이라고 해 주어야지, 내가 그 뒤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면 운이 좋은 사람은 실효성 있게 안 했는데도 넘어가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적발되면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는지? 이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인 피감기관

이 납득하려면 나름대로 실효성의 의미를,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민해서 실효성에 대한 기준을 지침 정도는 해 주어야 그것을 보지, 검사결과 실효성 있고 없고 하는 것이 금감원 마음이라고 하면 금감원 신뢰의 문제도 있을 것임.

(주)하나은행은 검사방해가 더 중하게 제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보다는 논란이 되는 지배구조 실효성을 가지고 더 중하게 조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감독하는 입장에서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사방해가 경한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

- (보고자) 양정조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검사방해 부분은 과거 여타 권역들에서 검사방해 사례가 쌓여 있는 것이 있어 형평성을 맞추었음.
- (위원) 내부통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얼마나 빨리 만들고 그것을 법제화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음. 그것은 검사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규제강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내부통제가 결국에는 경영 전반에 걸친 것을 다 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상호저축은행, 非은행도 해당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은행의 공공성이 더 크고, 특히 요즘 소비자보호 이슈가 은행 쪽에서 더 불거지

고 있으니까, 은행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대로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영역으로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실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금감원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님.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상대방한테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주어야 그분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대로 (주)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 원을 부과하는 금감원 원안에 대하여, 설명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위한 해당 은행의 양식이 일부 판매직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설명서 교부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上'에서 '下'로 변경하여 13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에 대한 영업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0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독일국채 금리연계 DLF를 판매했는데 예상과 달리 역사상 최저금리보다 이자율이 더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이 생긴 사건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각도에서 기관과 임직원들에 대해서 복수의 제재가 부과되었음.

먼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위반, 즉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쉽게 말씀 올리자면 우리 국민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규상 명확해야 함. 기관도 마찬가지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명확해야 됨.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후적으로 제재를 한다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영업을 할 수가 없음.

바로 이점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법규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해서 수차례 천명한 바가 있음.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됨. 그렇지 않으면 법의 자의적 집행이라고 선언하고 있음. 또한, 같은 원리를 대법원 판례에서 무수히 아주 여러 번 천명을 했음. 그런 점에서 과연 본 사건이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음. (주)우리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지적된 행위들이 예방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주)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이번 문제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정말 실체에 가깝겠느냐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됨.

문제는 일부 임직원들이 (주)우리은행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발생한 것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나? (주)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물론 있음. 그런데 그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즉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지금 현재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아래에서 만들어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과연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 규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음.

이번에 위반 사유로 지적하신 것은 4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유사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정해놓지 않아서 유사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 규정을 잘 만들어놓지 않았다. 그다음에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신상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품선정위원회의 결과를 상품선정위원들이 공유하는 절차를 만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적합성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투자권유하는 사유를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예시를 해놓고 표시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 상품판매에 여러 개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 상품은 안정성과 상관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했느냐, 그리고 사모펀드인데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의 규모를 고객들에게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는 절차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임.

그런데 지배구조법에서도, 지배구조법의 시행령에서도 그 다음에 지배구조법 하에서 만들어진 규정 어디에서도 이런 절차를 만들라고 한 것은 없음.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 DLF의 판매가 금지되었을 것이냐, 막아졌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음. 사건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임. 그래서 이 사건의 실질에 대해서 행위시점, 즉 내부통제기준을 만들 시점에 예를 들어 임직원이 상품선정위원회 절차를 위반할 것이다, 이런 유형으로 위반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유형의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됨.

(주)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펀드상품들은 운용사에서 출시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어떤 운용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는 (주)우리은행 내규에 있음. 그 다음 그런 상품을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상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가액 평가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운영할지 내부통제기준이 있음. 이런 절차들이 단계별로 다 작성이 되어 있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될 아이템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음. (주)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해당되는 조문들을 옆에 다 적시를 해놓았음.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시행령에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 바로 이것이 명확한 규정임. 명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100%한 개도 빠짐없이 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법규는 만들 때 미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상해서 만들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음. 시장이 변화하고 행위의 유형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따라잡아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성실한 규정 마련의, 법규 마련의 자세임.

(주)우리은행의 경우를 보면 가장 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무려 11차례나 개정을 했고 하위 기준인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 지침을 무려 10년 동안에 41번이나 개정을 했음. 그리고 표준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여타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련하면서 그때그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속 업데이트 해 왔다는 것임. 이런 노력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음. 결국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법규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설령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태료 산정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사전통지 받은 과태료는 법정최고금액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를 산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그 법의 정신을 반영해



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도 9단계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참작하라고 되어 있음.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속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나름 다 가지고 있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다,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더 실효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에서 출발하면서 위반행위가 은행의 고의다, 그리고 결과도 가장 중대하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놓은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록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저희들은 그 재량권을 기속재량의 기준에 맞게 행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림.

○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인지?

○ (진술인) 그러함. 5,000만 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그 다음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은 사전통지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3월로 통지했음. 결국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임. 첫 번째는 불완전판매 행위 자체가 은행이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와 주가가 하락하듯이 당시로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역사적으로 최저점보

다 더 내려가는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은행이 고의적으로 결코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임. 특히 이번에 불완전판매로 지적받은 행위들은 매우 형식적인 내용들임. 예를 들어서 약 87%의 경우에 고객설문지에 투자자 성향등급을 심사하기 위한 요소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고객한테 대면해서 듣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한 다음에 고객이 서명을 했음. 결국 실질적으로 물을 것 다 물었고 확인할 것 다 확인한 것임. 그리고 그것이 투자자의 서명에 의해서 증빙이 되어 있음. 심지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87%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행위가 불완전판매행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그 정신을 반영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는 사후수습의 노력, 손실경감의 노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도 기속재량행위임.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3개월 영업정지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은행이 고객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서 약 90%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이미 만족해서 합의를 했음. 그 다음에 은행의 내부통제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개선했느냐 하는 것은 또 보고를 드렸음. 그런데 이런 사후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났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아무래도 법정신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임.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를 고려할 때 꼭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이 대목임. (주)우리은행은 금리연계상품을 제조한 것이 아님. 이 설계와 부품의 조달은 우수한 외국금

유통기관이 했고 그것을 완성품으로 제조한 것은 자산운용사임. 그리고 운영자는 증권회사임. 그리고 그 제조사에서 말하자면 제품설명서까지 다 만들어서 판매사에게 제공했음. 판매사는 제조사가 만들어 준 제조품, 제조사가 제공한 제품설명서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를 했음. 그런데 그 제조사에게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경영유의'라는 정도의 제재를 하셨음. 이것은 정식적인 징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이 제품이 제조자가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제조자가 만들어준 제품설명서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에서 아마 '경영유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됨. 그런데 판매사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제재를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꼭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영업정지 6개월을 할 경우에 단순히 영업정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물론 영업정지 6개월 자체의 타격도 매우 큼. 독일국채 금리연계 DLF가 사모펀드판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에 불과함. 그런데 100%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임. 그 자체도 매우 심각하지만 소위 전체적인 영향력(collective effect)이 이렇게 심각함. 금융업 신규인가가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에 새로운 인·허가가 불가하게 됨.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신용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주)우리은행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상상 이상임.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영업정지 6개월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닌지 꼭 한 번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13억 원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213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조금 감경됐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음.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지를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사전통지 받은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13억 원을 산정하신 기준은 위반건수가 213건이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동기와 위반결과를 참작하는데 각각 어느 경우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이 최악이다. 그래서 위반동기도 ‘上’, 위반결과도 ‘중대’, 그래서 법정최고금액인 1억 원을 위반건수에 곱해서 213억 원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음. 우선, 213건으로 산정한 자체가 저희들은 법규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임. 위반행위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은행임. 광고를 몇 건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도 은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됨. 은행의 A직원과 B직원, C직원 3명이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여러 사람이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복수로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광고건수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됨. 그래서 정식으로 보면 80% 미만의 위반건수로 보시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을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부규정뿐만 아니라 판매시스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광고를 규제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볼 때 절대로 은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됨. 결과에서 82%의 건은 독일국채 금리연계 DLF가 아니라 미국금리연계 DLF임. 미국금리연계 DLF에서는 한 번도 손실이 발생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물의가 빚어진 적이 없음. 따라서 82%에 대해서는, 213건이라는 자체도 80건으로 줄여야 되지

만 그 중 82%는 결과가 결코 중대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중하다고 생각됨. 이런 사유의 참작은 결코 임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라는 점을 참작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

- (위원) 아까 3개월에서 6개월로 간 것이 노력에 비해서 거꾸로 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음.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인데 정상을 참작해서 만약에 1개월로 갔다면 뒤에 말한 문제점 있는데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있는지? 6개월과 1개월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 (진술인) 그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사모펀드 자체를 6개월 영업을 못하느냐, 1개월을 영업 못하느냐는 것은 우선 (주)우리은행에 발생하는 경제적 규모 자체가 벌써 6분의 1로 줄어 듦. 그 다음에 대외적인 신용이나 해외 감독기관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영업정지는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최대기간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거의 최소기간을 받은 것이냐, 이것은 평가하는 것이 아주 다름.
- (진술인) 금융업 신규인가 불가나 대주주 변경요건 불충족 이런 것이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영향이 있음.

- (위원) 기본적으로 3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 (진술인) 대외적으로 해외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취급해 보는데 법에서 정한 최대기간의 영업정지이나, 최소기간의 영업정지이나 하는 것은 해외 감독당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
- (진술인) 다른 것들을 이미 다 고려하고 제시했지만 특히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적용이 맞는지는 꼭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람. 과연 이렇게 법을 적용하면 수범자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주)하나은행이 의결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배구조법이 2015년부터 다른 법에 있는 지배구조 조항들을 전부 다 합해서 시행된 것이 2017년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법임. 그래서 완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석에 대한 것도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을 만들어나 가야 될 것이고 이번 사례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법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림. 이번에 크게 나누어 보면 불완전판매와 지

배구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불완전판매를 위반한 (주)하나은행과 (주)우리은행 제재대상자의 법률적 지위가 무엇인지? 「은행법」상 은행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업자로서 위반한 것인지?

- (보고자) 불완전판매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봤고 지배구조법상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위원) 자본시장법상 무엇인지? 투자중개업자로서 처벌한 것인데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한 것임. 왜냐하면 「은행법」상 겸영 개념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라는 것임. 「은행법」 제28조 제1항에 보면 겸영업무라는 것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쓴 내용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이러이러하여야 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한, 은행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것임. 그러면 지배구조법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올린 안을 보면 (주)하나은행도 그렇고 (주)우리은행의 경우도 집합투자상품 판매 관련 또는 펀드판매 관련, 사모펀드 판매 관련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면 이때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행위자의 근거법상 지위는 무엇인지? 집합투자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마련하지 않은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의 근거법상의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임.
- (보고자) 지배구조법 제35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 보

건데, 조치권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개별 법률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제35조는 임원에 대한 조치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음. 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임. 그리고 제2조로 넘어가면 금융회사의 정의가 나오는데 금융회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보고자) ‘가’ 목에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고, ‘나’ 목에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이렇게 되어 있음.
- (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제24조에 내부통제기준이 있음. 그러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금융회사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임.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지금 위반의 근거로 얘기한 것은 ‘집합투자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임. 그러면 이때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지위인지, 은행업자의 지위인지?
- (보고자) 내부통제 전체 기준을 마련하는 독립체로서는 은행이 맞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당 부분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자임.



- (위원) 조치권에 대한 대상과 그것을 섞어서 그러함. 우리는 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지배구조법에서는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만약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집합투자판매업 겸영허가를 안 가지고 있다면 은행은 집합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 (보고자)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 그런 의무는 없음.
- (위원) 그러함. 겸영금융투자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 그때의 겸영이라는 말은 「은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겸영의 정의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되어 있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상 이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나에 따라 근거법이 결정되는 방향임. 그래서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때는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확정해 봐야 근거되는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임. 왜냐하면 과태료는 지금 외형상의 은행, 그러니까 (주)우리은행이든 (주)하나은행이든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면 똑같은. 그것이 '上', '중대'가 되었든 '중', '중대'가 되었든 관계없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행업자로서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러나 무슨 행위를 위반했느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왜냐하면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충분한 법령해석과 적용에 대한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중요한 말씀이시고 동의함.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사례(case)인지?
- (위원) 두 번째 사례임.
-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이 겸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사례인지?
- (위원) 지금 그것으로는 첫 사례임.
-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형평성 고려와 관련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영업정지 6개월은 (주)하나은행과 똑같이 나가지만 근거는 다른 것임. (주)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주)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보다는 제조 관계 그쪽에 더 중점이 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비교는 아마 제조와 관련된 증권사와 자신들의 제재내용이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음.
- (위원) 아까 진술인들이 얘기한 것 중에 3개월 일부영업정지 통보했다가, 물론 그 통보가 확정은 아닌데, 왜 6개월 일부영업정지로 갔느냐에 대한 질문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먼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사모펀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시장에 시사해 주는 차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해야 실효적으로 영업정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고 있음.

그 다음에 제가 증권사 제재결정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관 영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피해를 본 것이지, 개인이 피해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기관 자체도 피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임.

- (보고자)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테일 측면에서 불완전판매가 없었던 점들을 고려했음.

그리고 (주)하나은행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 상품을 판매하기 전 단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불완전판매 규모 자체로 봐서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기관경고' 이상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주)하나은행이 워낙 커서 그렇지 (주)우리은행도 거의 900억~1,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100억 원이라는 금액기준을 크게 뛰어 넘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 손실금액으로 보면 2월 2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금액만 보더라도 (주)하나은행이 668억 원이고 (주)우리은행이 770억 원으로 더 많음. 그리고 금감원이나 각 은행의 민원접수 제기된 건만 보더라도 (주)하나은행이 125건, (주)우리은행이 200건으로 어디가 더 잘못했다 잘 했다는 것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것이 있어 저희가 ‘영업정지’로 한 것임.

- (위원) 진술인은 87% 손실 안 났다는 말이 팩트가 맞는지, 그 팩트가 맞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처럼 손실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87%를 빼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아까 은행 측에서 얘기한 것과 다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고, 은행이 얘기한 것은 사모펀드 투자광고에 대한 것인데 (주)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미국, 영국, 또 문제가 가장 컸던 독일 상품이 있는데 미국 스프레드상품 30년-2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환도 다 완료되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A라는 고객에게 여러 번 보낼 수도 있음. 그러면 처음에 미국 상품 광고를 받고 그 다음에 영국 상품 광고를 받고 독일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독일 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미국 스프레드 상품에 대한 광고는 효과가 없느냐, 직접적인 효과를 따져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위원) 그렇게 해서 87%는 빼 준 것인지?

- (보고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의 87%의 결과 부분은 '중대'에서 '보통'으로 하향했음. 다만, 특정 지점의 특정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전체 규모의 거의 15%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나중에도 계속 피해를 유발 시켰기 때문에 그 직원이 발송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미국 스프레드금리, 손실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중대'에서 '보통'으로 낮추었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증권사와 (주)우리은행에 대한 조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만든 것은 맞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우리은행이 단기에, 판매수수료를 이모작, 삼모작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기이면서 위험한 상품을 사실상 OEM 방식으로 증권사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감안되었음.

- (위원) 계속 형평성과 일관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감독당국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 건 한 건은 맞는데 전체로 모아봤을 때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면 신뢰성이 없는 것이니까 금융위와 금감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우리가 실효성 부분은 처음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은 중복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니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 놓아야 신뢰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고민해 주시기 바람. 객관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은 결과가 좋으면 실효성 있고 결과가 나쁘면 실효성 없

다고 생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대로 (주)우리은행에게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하는 금감원 원안에 대하여,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공되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上'에서 '下'로 변경하여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대로 (주)우리은행에 과태료 213억 원을 부과하는 금감원 원안에 대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 DLF상품에 대하여 위반결과를 '중대'에서 '보통'으로 변경하되, 다양한 DLF상품에 대하여 위법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특정 직원의 투자광고는 '중대'로 유지하여 185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우리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에 대한 영업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71호 『(주)무궁화신탁의 현대자산운용(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72호 『(주)무궁화신탁의 현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73호 『(주)안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74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75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6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7호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을 상정하여 금융  
위원회 행정인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1시 35분 폐회)